

라임·옵티머스사태, 정계·청와대까지 확산 “대규모 자금, 로비 없이는 불가능”

W 금융 이슈리포트

23일 금융위·금융감독원 감사
前 민정수석실 행정관 증인 출석
여권·정부관계자 연루여부 주목

국회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정국을 뒤흔들 뇌관으로 떠올랐다. 당초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은 금융사기 사건 정도였다면 이제는 금융당국은 물론 정치권과 청와대 연루 의혹까지 파장이 커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지난 13, 14일에 이어 종합감사 역시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주권과 질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에는 증인으로 옵티머스 사태의 핵심 인사로 지목되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 다른 듯 닮은 '라임·옵티머스'

라임자산운용이 일부 펀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처음 선언한 것은 지난해 10월이다. 환매중단 규모만 무려 1조 6000억원이 넘는다. 제2의 해외금리연계파생결합펀드(DLF)인가했지만 라임사태는 불완전판매는 물론 자신의 98%가 부실해진 이후에도 투자를 속여 펀드를 판매한 경우도 있었다.

옵티머스 사태 역시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시작됐지만들여다보니 라임사태보다 더했다.

라임이 그래도 투자를 하다가 손실을 입었고, 그 손실을 감추려던 것이었



지난 16일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 하고 있다. /뉴스스

다면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였다. 자금을 모으며 내세웠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에는 아예 투자한 적이 없었으며, 사모사채 발행사를 경유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펀드간 돌려막기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사용했다.

금융당국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일차적으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에 대한 부실감독과 안이한 대응이지만 옵티머스형 사기가 가능했던 것은 사실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정책이었다.

이에 사모펀드 감독부실 책임과 맞물려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 금융권 넘어 권력형 게이트로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2라운드 무대는 금융권이 아닌 정치권이다. 규모도 크지 않은 사모펀드 운용사가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금융당국은 물론 정·관계 로비가 있지 않고서야 가능했겠냐는 얘기다. 로비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은 여야

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라임 사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이라는 폭로성 발언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김 전 회장은 라임의 실질적 전주(錢主)로 정관계로비의 중심에 있었다.

김 전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행 행장 로비와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등에게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수 억원을 지급 했다"며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 로비했고 검찰에 이야기했으나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행장, 부행장에 대한 로

비 주장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와 관련해 법적조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반박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오는 23일 국감 증

인으로 서는 이모 전 청와대 행정관의

발언에 따라 항방이 갈릴 것으로 보인

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구멍난 소상공인 2차 대출 3개월만에 부실 100건 ↑

박용진 의원 휴·폐업 80건 최다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 병행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차 대출이 시행되고 있다. 다만 대출이 시행된 지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부실이 101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방식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2차대출이 시행된 5월 25일부터 8월 말까지 대출을 받고 3개월 이내에 부실이 발생한 건수는 101건이었다.

3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1건, 60일 이내에 발생한 부실은 32건이다. 68건은 시행 90일이 되지 않아 부실로 처리됐다.

부실 사유는 휴·폐업이 8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개인회생·파산(11건), 원금·이자연체(6건), 기타(4건) 순이다.

수탁은행별로 보면 부실이 발생한 대출은 신한은행이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하나은행이 9건, 기업은행이 4건, 국민은행·대구은행이 각 2건, 농협·우리은행이 각 1건이 뒤를 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대출 한도 상향(1천만원→2천만원)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3일 서울 종구 NH농협은행 본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소상공인 2차 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을 대신에 은행이 직접 보증업무를 하고, 대출을 집행하는 위탁보증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위탁보증은 직접보증보다 부실률이 높다. 지난 7월 말 기준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5.40%로 직접보증(2.75%)의 2배이다.

이번 소상공인 2차 대출은 기존 위탁보증(80%)과는 달리 95% 보증비율로 지원돼 부실률이 더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용진 의원은 "단순하게 자금만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소상공인을 돋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컨설팅 등 비금융 방식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銀, 최대 실적에도 정규직 ↓ 비정규직 ↑"

박광온 의원 금융통계자료 분석

KB국민은행은 정규직수가 지난해 1만6738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20명) 줄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28%(267명) 늘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정규직이 각각 4.1%(522명), 0.7%(104명) 줄고, 비정규직이 각각 20.3%(159명), 7.4%(159명) 늘었다.

신한은행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1.0%(132명), 13.3%(117명) 늘었다.

NH농협은행은 정규직이 0.5%(74명) 늘고 비정규직은 3.8%(107명) 줄어 고용의 질이 소폭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은 "시중 은행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에도 정규직 은행원이 떠나는 자리를 비정규직으로 채우면서 고용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며 "금융권이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5대 시중은행 직원 현황>

은행	구분	2018년 4분기	2019년 4분기
KB국민은행	정규직	17,158	16,738
	비정규직	953	1,220
NH농협은행	정규직	13,511	13,585
	비정규직	2,794	2,687
신한은행	정규직	13,496	13,628
	비정규직	880	997
우리은행	정규직	14,291	14,187
	비정규직	1,074	1,153
하나은행	정규직	12,847	12,325
	비정규직	784	943

단위: 명

/박광온 의원실



SINCE 1978
제일건설(주)

운정신도시에서 처음 만나는
NEW LIFE PLATFORM

운정신도시 | 제일풍경채 | 그랑퍼스트 |

10월 16일 GRAND OPEN

규제 청정지역! 확실한 투자가치!
등기 전 전매가능

1877-7720
59㎡, 74㎡, 84㎡ 총 1,926세대